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12월 1일 목요일 (음 11월 3일) 제169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지난달 30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농상생 공공급식 광역지자체-서울시 협약식에 박원순 서울시장, 송하진 전북지사, 이낙연 전남지사, 최문순 강원지사를 비롯한 9개 시도지사와 부지사들이 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방훈 제주정무부지사, 조규일 경남서부부지사, 정병윤 경북경제부지사, 이낙연 전남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허승욱 충남 정무부지사, 설문식 충북정무부지사,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 <관련기사 2면>

## “박근혜 자진 사퇴가 답”

**송지사, 3차 대국민담화 관련 “촛불 든 국민 요구 거부 책임은 국회에 떠넘기기 헌법에 대한 예의 저버려 탄핵 절차 빠르게 진행을”**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석고대죄만이 답이다”  
송하진 도지사가 지난달 30일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와 관련한 입장 발표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말하며 “헌법 정신에 따른 대통령 즉각 퇴진의 결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이 논평을 통해 “국민들은 미증유의 국정 농단에 따른 비상사국에서 허탈과 실망과 분노를 최대한 인내해가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검찰조사 과정의 범죄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면 부인하고 국회에 모든 화살과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치적 폄수를 통해서 시간벌기를 택했다”며 “국민과 나라의 근간인 헌법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렸다”고 성토했다.  
송 지사는 이어 “이제는 오로지 국민들과 함께 하는 대통령 탄핵과 특검수사·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만이 국정 정상화를 위한 길”이라며 “국회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헌법 정신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탄핵 절차를 빠르고 확실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민형 기자

# ‘유아공교육체제 발전 특별회계법’ 누리과정 해결 예산부수법안 지정

유치원 누리과정,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복지부 소관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 내국세 충당 시도교육감 편성 거부 논란 원천 해소 등 기대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법안에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귀추가 주목된다.  
유성엽 국회의원회차총국문답위원회(국민의당, 정음·고창)는 ‘유아공교육체제 발전 특별회계법안’이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일명 ‘유성엽 법’으로 불리는 이 법

안은 전날인 29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정한 총 31건의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으로 포함된 것이다.  
이 법안은 교육부 소관인 유치원 누리과정은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고,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 1조 9,000억원 가량은 내국세로 충당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전액을 충당하도록 하는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안과 전액 내국세로 부담하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의 절충안 성격을 갖고 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 교문위와 누리과정 해결을 위한 여야정 5자 협의체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 받아왔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전체 누리과정 비용 중 절반을 내국세에서 충당하게 돼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 충당하던 이전에 비해 예산의 안정성을 높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보건복지 소관인 어린이집 누

리과정 비용을 내국세에서 부담하게 해, 시·도교육감의 편성 거부 논란을 원천 해소하고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법률적 문제까지 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 위원장은 “여야정당과 정부가 제가 제출한 누리과정 특별회계법안을 기준으로 막판 세부사항 조율 중이고, 예산부수법안으로도 지정되어 그 어느 때보다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며, “누리과정 법안 중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12월 본회의에서 이를 반드시 통과시켜 해마다 반복되어 온 보육대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최순실 특검에 박영수 변호사

박 대통령 임명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사진) 변호사를 임명했다. 그동안 자신을 수사했던 검찰의 노고에 고맙다는 뜻과 함께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 대통령은 오늘 아담이 추천한 특검 후보 2명 중에서 박영수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했다”고 전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원내대표는 국회 회동을 통해 특검 후보로 조승식(64·사법연수원 9기) 변호사와 박 변호사를 추천한 바 있다.  
대전고검장, 서울고검장 등을 역임한 박 변호사는 조직폭력 수사 등에 능해 ‘강력통’ 검사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게 한 주역으로 알려졌지만 강력 뿐만 아니라 공안·특수 분야도 두루 거쳤다.  
특히 2005년 4월부터 이례적으로 2년 가까이 대검 중수부장으로 근무하며 특수수사에 정통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재직 시절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론스타 외환은행 불법 매입 의혹 사건’ ‘SK분식회계 사건’ 등을 수사했다.  
정 대변인은 또 “박 대통령은 이번 특검 수사가 신속 철저하게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이번 일로 고생한 검찰 수사팀의 노고에 고맙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본격적인 특검수사가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특검의 직접조사에도 응해서 사건경위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라며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의 모든 진상이 밝혀지고 책임이 가려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특검 수사에서 벌어진 치열한 법리공방에 대비해 4~5명의 변호인단을 꾸리기로 한 청와대는 이날 특검 임명이 마무리됨에 따라 조만간 변호인단 명단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 최순실 국조 첫날... 검찰총장 불출석 놓고 시작부터 파행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가 대검찰청을 비롯한 1차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지만 김수남 검찰총장 불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일면서 시작부터 파행을 빚는 등 험난한 여정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특위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오전 국조 전체회의를 시작하며 “대검찰청의 경우 검찰총장, 차장, 반부패부장 중인 3명이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출석을 하지 않았다”며 “사유를 보면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이 선

례가 없다는 점과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중립성, 공정성을 기한다는 이유인데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날 특위는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5개 기관에 대한 기관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검찰청의 경우 자리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김현용 전 법무장관의 경우 사표가 수리되면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오늘 5개 기관에 대한 기

관보고는 국조특위 전체 계획서 상 나온 의결사항”이라며 “증인석에는 그 어디에도 대한민국 대검찰청이라는 기관은 있지 않는데 이것은 법적 효력에 비유하는 국회 의결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무시하는 것”이라고 김 총장 불출석에 반발했다.  
반면 새누리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오늘 검찰총장 불출석은 당초 국조특위에서 채택했던 국조 계획서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말한다”며 검찰총장 불출석을 옹호했다. 이 의원은 “국조

계획서 초안에는 법무부만 돼 있었지만 검찰청장이 추가됐다”며 “이 자리는 전 국민이 보는 국조특위인데, 수사 내용을 검찰총장이 밝히면 향후 어떻게 공정한 수사가 되겠냐”고 주장했다.  
여야간 공방이 계속되자 김 위원장은 일단 증인 선서를 받고 회의 진행을 계속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민주당 박영선 순혜원 의원 등은 자리를 박차고 회의를 떠났으며, 논란이 계속되자 김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김 총장에게 오후 국조에는 출석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뉴시스

▶ 매일 INDEX

2면 ‘규제프리존 철회하라’

3면 ‘박근혜 탄핵안 2일 처리위해 최선’

### 고마제 찜질방 12월 1일(금) OPEN

## "고마제 찜질방이 새롭게 문을 엽니다."



- 영업시간 : 오전 10시 ~ 오후 12시
- 수면합분 : 오후 10시까지 입장가능
- 입장료 주간 : 8,000원
- 야간 : 13,000원
- 매주 월요일은 휴무입니다.

고마제찜질방  
**(주)알랜드** 부동산토털서비스  
www.fland.tel

### 고마제 찜질방

부안군 동진면 장동리 591-6  
Tel : 584-7100

